光日春秋

전 순 옥

여성의 역할·권리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문제는 사회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여성문제만 있고 남성 문제는 없는가 할 때 모르기는 하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여성이 지니는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시작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직업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 즉 고용이나 임금, 승진,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는데 실패하면서 여성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 이전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책임, 자녀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산을 담당해 왔다.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성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도 가사노동에서 사회노동으로 확장됐다. 여성들의 삶 또한 대단히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혹자는 여성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활동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한다. 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여성이 져야 할 짐도 두 세배로 커졌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만큼 정당한 대가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여권신장을 위한 투쟁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00여년 전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바라 볼 때 어떠한 대답도 만족스럽게 얻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요구에 답할 것이며,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과연 남녀 불평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가 서로 돕는 협력자로 공존하는 평등사회는 올 것인가?

이와함께 그동안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과연 여성이 어떻게 하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를 하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등하려고 했을 때 여성은 슈퍼 우먼이 되기를 요구한다.

최근 영국여성운동이 새로운 이론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Women's Institute'가 개체했던 토론회 결론은 "여성들이 사회로가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 가자"는 것이다. 영국여성운동은 참정권(1918-1928) 운동부터 시작해 동일임금과 동일노동이 1970년대에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백년을 넘게 투쟁해온 결과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진출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여성들이 목적에 도달하고 보니 그곳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곳, 즉 남성주도의 사회는 여성으로서 넘지 못할 벽이 너무 많았다.

둘째, 여성들이 전문 직업인이 되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별 도움이 안된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와 교육문제 등을 들고 있다. 특별히 출산과 육아문제는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가중되어 있다. 여성노동력을 사회의 필요에 의해 활용을 하면서도 여성의 짐은 사회가 함께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정해져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역할이 부정확 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회 경제활동만 하는 남성과 비교 할 때,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한다.

왜 사회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은 간단하다.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과 권리도 함께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도록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자세가 필요하다.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김 용 억

지도자의 자질, 삶의 질을 바꾼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캄보디아. 변화는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킬링필드'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그 가난했던 나라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한 주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사의 시간을 보냈다. 딱 6년 만에 다시 찾은 캄보디아였다. 국내에서 무료진료를 하다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 2001년부터이니 벌써 6년 전이다. 주로 가난한 나라들의 시골 마을들을 돌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 캄보디아였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다.

가난한 나라의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 하나. 한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 발전도 의료혜택도, 나아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도자 한 명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다.

2001년 해외 의료봉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찾았던 캄보디아. 그 해 나는 탈수가 심한 애를 업고 수km를 맨발로 걸어서 찾아왔던 한 미혼모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 할 수 없었다. 초기에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별탈이 없을 상처를 악화시켜서 찾아 오는 환자들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에 찾았던 캄보디아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환자들의 상태가 달랐다. 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대하는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이 주로 어떤 병 때문에 고생하는가를 보면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곤 한다. 캄보디아는 한 마디로 환자의 질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모습을 벗고 있었다. 도대체 지난 5년 사이에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각종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의 2004년 1인당 GNP는 300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의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내가 체감한 바로는 최소한 1인당 GNP가 1천달러 수준은 되는 듯했다. 그만큼 생활수준이 크게 좋아지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2003년 7월 총선 이후 1년 동안 극심한 정국 불안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삶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캄보디아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7월 신정부가 구성되면서부터다. 신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큰 흔들림 없이 각종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번에 내가 만난 환자들이 6년 전에 만났던 환자들과 질이 달랐던 배경이다.

지도자가 누구인가, 지도자의 자질이 어떠한 수준이고, 그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구성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았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또 한 번 지도자를 뽑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에 의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의 이번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있을 선택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신대학교 교수〉

기 고

선 만 수

'노인수발제도'에 관한 오해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입원까지는 필요치 않으나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다.

현재 건강보험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처음 '요양보험'이었던 제도 명칭이 '수발보험제도'로 변경되기까지 많은 논란을 거쳤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의료와 수발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본 개호보험제도가 '요양', 의료와는 구분된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제도를 '수발'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이 정부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묻혀지고 현대판 고려장제(高麗葬制)도 아니고 노인들의 단순 장애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성급한 우려가 있다.

즉 정책당국이 명칭을 '수발'로 변경한 것은 비의료적 서비스에 비중을 둔 제도로 가겠다는 정책의도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시한 목적은 이렇다. 그동안 치매, 중풍 등 만성퇴행성 노인환자에게 본인 및 가족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던 간병이나 시설요양을 새로운 공적제도로 도입, 전문가들이 비용 경제적, 질적 측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의 제도 도입은 그 사회 전반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조직을 공식화하는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인력 등 제도 관련 인프라 전반이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2008년 전면확대를 앞둔 2차 시범사업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된 제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

독자마당

쌀 소비 관련 대체상품 개발, 정부가 적극 나설 때

무안에서 평생 동안 쌀농사만 지어온 부모님과 전화 통화 할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이제 농사 그만 때려치우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신다.

정부가 외국에 농산물 시장만 개방했지, 이후 농민들을 위한 후속 대책에는 무관심한 탓 때문으로 생각한다.

얼마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명품가게가 즐비한 도심 한복판에서 '쌀 커피', '쌀 아이스크림'등 쌀을 이용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것을 봤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인데, 부러웠다.

일본의 경우 도꾜에 '쌀 갤러리'를 마련하고 쌀관련 상품을 전시하는데, 주부·할머니부터 10~20대 젊은이들로 북적거린다고 한다.

대도시에 이러한 갤러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시인들에게 우리의 쌀을 찾게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 생활화 해야

직장 동료가 식사 도중 갑자기 숨졌다. 평소 마라톤 등 운동을 좋아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온 동료는 무리한 운동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너도나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다. 하지만 자기 나이와 체력에 무리가 가는 과도한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이 하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식은 곤란하다. 건강을 찾겠다며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맞춤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조화순·목포시 옥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남북 평화공존의 절실함 다시 강조한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제 비 내리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6·15 6돌 민족통일 대축전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겨레를 향해 중요한 메세지를 던졌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5·18 정신의 계승임을 강조한 뒤,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도 베트남식 무력통일도 아닌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한 '합의통일'이 되어야 함을 재천명 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세계사상 유례가 드물게 1천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자랑스런 '통일대국'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7천만 겨레가 해나가야 하며 남북이 서로 공존하다가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가 될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상적인 어법을 썼다.

물론 김 전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강경기조와 미국의 압박, 여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남한내 대북 유화정책 반대 조류등 미묘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정치지도자가 강조한 '통일의 총론'은 그때그때의 시류에 따라 춤추는 '통일의 각론'들에 의해 자칫 잊혀지기 쉬운 대원칙을 분명히 해준 것이었다.

기실,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방법론상 햇볕정책을 계승해 나가면서도 과거완 달리 주도권을 상실해왔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을 몰래 도와주는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서 좌초된 6자회담을 되살리지도,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지도, 미국의 전략전환을 촉구하지도 못했다. 더욱 심각한 건 변화없는 북한의 태도에 피로를 느낀 남한 국민들 사이에 '북한 퍼주기 반대'기류가 커지도록 방치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최소한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는 6·15 선언의 대원칙을 다시 인식하고 국민모두의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31 민심은 '저항'이 아니라 '심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개혁피로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면서 "부동산,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을 방문한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정부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는 오류가 없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5·31 선거참패 원인을 민심이 개혁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특유의 독선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남은 임기동안도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냉철한 반성은 커녕 기존 정책방향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은 여론을 무시한 독불장군식 행보나 다름없다.

설사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국민이 등돌리는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리 만무하다.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노 대통령 자신의 말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5·31 민심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편가르기 식 반시장 정책과 빗나간 양극화 해소 해법 등 지난 3년간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사상 유례없는 선거 참패를 당하고도 대통령이 교조적 논리 탓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지도체제를 꾸린 것과 대조된다. 공허한 개혁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뿐이다.

無 等 鼓

꼭짓점 댄스

중국의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은 우리 민족을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적고 있다.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其民喜歌舞), 나라의 읍락에서는(國中邑落),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들어(暮夜男 女聚), 서로 따르며 노래하고 춤춘다(相就歌戲)"

그래서 동이전에는 우리를 고무진신(敲舞盡神)민족이라고 불렀다. 북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화끈하게 일하고 노는 민족이란 얘기다. 이 설명은 우리 민족을 얕잡아 보고 비아냥거린 측면이 있다. 한데 요즘 '꼭짓점 댄스'가 온 나라를 휘젓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은 확실히 신명이 많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얼마 전 한 영화배우가 TV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보인 것이 시초가 된 꼭짓점 댄스는 지금 나이트클럽, 학교, 군대 가릴 것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면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다.

이 춤은 피라미드의 한 면인 삼각형 대형으로 벌여선 다음 꼭지점에 있는 리더의 동작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춤이다. 배우기 쉽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춤의 인기 비결이라고 한다.

물론 꼭짓점 댄스 열풍에 뜨악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 살기도 팍팍한데 무슨 춤판이냐는 얘기다.

그런데 정작 이 춤을 만든 장본인은 더 이상 꼭짓점을 추지 않는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배우는 수 많은 기업체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꼭짓점 댄스 관련 광고 섭외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배우로서 인정받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관심을 끈 것 같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배우의 이 같은 태도는 돈이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요즘 세태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눈 안 팔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지키는 이 배우를 국회로 보내면 어떨까.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